

#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비교 연구

## A Comparative Study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and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전기중\* · 김태환\*\*

Jeon, Ki-Joong · Kim, Tae-Hwan

### 요약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개정 사항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범위 확대 및 산재예방 책임주체 확대 등의 많은 사항들이 개정되었다. 뒤이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며,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비교 결과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좀 더 넓은 범위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한다는 데 그 역할을 두고 있다.

**Keywords :**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 중대시민재해

### 1. 서론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개정 사항에서 첫째로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범위 확대 및 산재예방 책임주체가 확대되었고, 둘째로 도급의 책임범위 확대 및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사항 등의 도급 관련 개정사항도 포함되었다. 이러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후에 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각 적용 범위에 따라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 이외 새로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상에서 기업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중대산업재해와 공공기관 및 공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수단 등의 방대한 적용범위의 안전을 추구하기 위한 중대시민재해가 포함되어 있다.

### 2. 본론

산업안전보건법이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시민과 종사자(근로자, 노무 제공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한다는 데 있어서 차이점이 있다. 안전 의무 범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범위가 많은 논쟁에 중심에 있다.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안전보건 조치 의무의 범위 안에 있는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안전 의무의 범위가 포괄적인 것이 그 이유이다. 특히, 도급 사업의 책임 범위에서 비교해보면 도급인의 사업장 전체 및 지정 관리 장소에서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시설, 장비, 장소가 포함되는 것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도급사업의 책임 범위 또한 강화되었다. 처벌 대상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경영책임자 등의 사업을 총괄하는 대표자 또는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에게 처벌 대상이 되었으며 개인의 처벌 또한 대폭 강화되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망 사고 발생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상사고 발생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망사고 발생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부상사고 발생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또한 법인 기준이 강화되었고,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처벌이 새로 신설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산업안전보건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과 종사자(근로자, 노무제공자 등)의 생명과 신체 보호</li> </ul>	<b>목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괄적 위험 방지 의무 부여</li> </ul>	<b>안전 의무 범위 (의무 강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체적이며 명시적 안전·보건 조치 의무 부여 (산업안전보건기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시설, 장비, 장소</li> </ul>	<b>도급사업 책임범위 (범위 확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급인의 사업장 전체 및 제공·지장하는 장소로써 지배·관리하는 장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책임자 등(사업을 총괄하는 대표자 또는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li> </ul>	<b>처벌 대상 (중심 이동)</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로 관리책임자 및 실무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망사고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li> <li>• 부상사고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li> </ul>	<b>개인 처벌 기준 (처벌 강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망사고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li> <li>• 부상사고 등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망사고 : 50억 이하의 벌금</li> <li>• 부상사고 : 10억원 이하의 벌금</li> </ul>	<b>법인 처벌 기준 (처벌 강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망사고 : 10억원 이하의 벌금</li> <li>• 그 외 위반 : 5,000만원 이하의 벌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손해액의 5배 이하 범위내 배상 책임</li> </ul>	<b>징벌적 손해배상 (신설)</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없음</li> </ul>

그림 1.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비교 현황)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되며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의 다른 차이점은 더욱 강화된 요구사항들이 추가되었다는 점이다. 기업 및 기관의 안전보건에 대한 경영방침,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한 전담 조직, 안전 및 보건의 전문인력 배치(300인 이상 기업) 및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 매뉴얼의 작성 운용 등의 실무적인 부분에서 큰 변화가 생겼다.

### 3. 결론

산업안전보건법이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좀 더 넓은 범위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한다는데 있어서 차이점이 있다. 기존의 근로자 이외에 사업장 전체의 모든 종사자의 생명을 지키려한다는 범위에서의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는 긍정적이다.

다만 구체적이지 않은 의무 범위와 처벌 대상 등이 많은 기업 및 기관, 근로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부분 또한 사실이다. 실무적 입장에서는 범위를 한정해야만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인력 및 예산, 시설 등에 대한 소요를 반영한 관리계획 수립 등 조치의무사항을 구체화하고 계획을 실행하기 용이하다.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후 아직 많은 기업과 공공기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준비와 이해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며 이에 따른 조직체계에도 혼선을 맺고 있다. 이 법의 도입 취지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목적하는 것이 아닌 방지의 목적인 재해를 줄이기 위한 자체적 안전보건(조직체계마련과 교육 포함)을 강화하여 위험을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이 중대재해처벌법의 본 목적에 맞게 기업과 공공기관에서는 근로자와 노무를 제공하는 자 모두의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문화의 정착과 함께 사고와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법제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제처)
-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공포(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